

“폼나게 사표”... “좋게 좋게”... 사과만 오간 국회 예결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상민 “안부 문자라고 생각” 민주당의 사퇴 요구엔 선 그어 이진복, ‘MBC 배제’ 발언 못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뉴스

비경제부처 대상으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또 다시 여당과 야당의 충돌로 마무리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 등 32개 기관이 심사 대상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장관 책임론을 비롯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좋게 좋게 합시다’란 발언으로 여야가 또 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행안부 등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은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안부 문자라고 생각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

면서 “그 표현을 하게 된 것은 기자가 사전에 인터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기사화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이상민 장관은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겠나’라고 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었다. 이 장관은 〈중앙일보〉 기자에게 보낸 관련 문자내용과 함께 ‘하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밝혀 엄중한 상황에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장관은 “이번 참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을 하던 중에 나온 말”이라면서도 “사적인 문자라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 장관은 야당의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요구엔 선을 그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장관이 (직에) 계시지 않아야 사태가 수습된다”고 사퇴를 권했다. 이 장관은 “사퇴라는 것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안타깝고 통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왜 경찰국을 만들었나. 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이 장관은 “경찰국은 그런 조직이 아니고 경찰을 지원하는 기구다”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할 총리, 경찰청장 나아가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회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에 책임 회피에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의 운

명을 걱정하고 있다”며 “엄한 하위 경찰, 소방 공무원만 희생양을 삼으려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절단나겠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적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당장 사퇴하시고 다시는 이 자리에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계속하지 말라. 국민 염장 지르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MBC(문화방송)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고 의원은 비판 보도를 한 MBC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이수석은 MBC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이 수석이 고 의원에게 ‘좋게 좋게 합시다’라고 말해 야당의 강하게 이 수석을 질책했다. 결국 이 수석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다”며 야당 의원에게 사과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조강특위 조직정비 속도... 주 2회 회의

조강특위 위원장·위원 임명장 수여 접수자들에게 대한 기초서류 검토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공석인 66곳에 대한 공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제22대 총선 대비 차원으로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합인경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2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주까지 접수를 받고, 최대한 회의를 일주일에 두 차례 하고 있어서 (공석인 당원협의회 위원장 임명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 같다. 열심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조강특위는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 직전 공도 지역에 대

한 상황 점검과 함께 당협위원장 공모에 응한 인사들의 기초 서류 검토를 했다. 2차 회의에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강특위 위원장 및 위원 임명장 수여식도 가졌다.

정 위원장은 임명장 수여 직후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세력은 실사구시, 민생 중심, 글로벌 민생을 지향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제22대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드는 데 조강특위가 초석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특위는 오는 16일 예정된 3차 회의에서 공석인 당협위원장에 지원한 접수자들에게 대한 기초서류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함 대변인은 “최대한 회의를 일주일에 두 차례 정도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조강특위는 지난 9일 첫 회의에서 당협위원장이 없는 사고 당협 69곳 가운데 66곳에 대해 재공고하기로 했다. 재공고하지 않기로 한 3곳은 서울 노원병(이준석 전 대표), 서울 강서병(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 경기 동두천·연천(김성원 의원) 등이다.

조강특위 결정에 따라 당은 10~16일까지 공고를 진행했다. 지원서 접수는 17~18일까지다. 조강특위는 지원서 접수 종료 이후 심사와 면접 등으로 공석인 당협위원장을 채울 방침이다.

추가 공고에서는 지난 공모 당시 탈락한 인사도 추가 접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함 대변인은 “추가 접수, 공모 기간이기 때문에 받아보고 세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野, 감사원법 개정안 제출... “정치감사 방지”

“감사원, 유병호 독임제 기관 전락”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방지하고, 헌법상 보장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과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 김의겸 대변인은 14일 오전 10시 28분 국회 의안과에 ‘정치감사방지법’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15개 항목에 걸친 큰 규모의 개정법”이라며 “대한민국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고 헌법상 심의 기관, 합의제 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 사실상 감사원의 독보적 1인 체제를 굳히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한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당론 발의된 정치감사방지법은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비즈니스 친화적 디지털 규제환경 구축”

》1면 ‘尹, B20 서밋 기조연설’서 계속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이 민간 부문을 구축(crowd-out)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믿음”이라며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와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정부는 크게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주도 성장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전환”이라며 “디지털 기업들이 아닐로고 시대의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낯은 규제를 혁신하고,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

는 비즈니스 친화적 디지털 규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직업 훈련 개혁 착수 및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사이버 보안과 같은 핵심 디지털 분야의 기술 개발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역점과제로 추진해 민간 주도로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가 결합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측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려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디지털 생태계는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누구나 디지털 데이터에 공정하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경을 초월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B20을 중심으로 인류가 공감하는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구축을 위한 G20 차원의 논의를 선도하고 B20과 G20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구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번 글로벌 복합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위기 이후에 세계가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與, 당무감사 실시... 이성호 위원장 임명

당무감사위원장 ‘만장일치’

국민의힘이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 대한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기 당무감사를 진행할 당무감사위원장에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비롯해 판사로 재직했고, 2015년 제7대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돼 3년간 재직하는 인사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66개 사고 당협 정비, 정기 당무감사 실시는 집권 여당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며 정기 당무감사 실시 사실을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정기 당무감사는 매년 1회씩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4월 총선 이후 정기 당무감사가 없었다.

정 위원장은 이 같은 점을 언급한 뒤 “(사고 당협 정비와 정기 당무감사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석인 당무감사위원장에 이성호 전 위원장을 추천했다.

비대위는 정 위원장이 추천한 이 전 위원장을 당무감사위원장에 임명하는데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성호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부터는 인권위원장을 지냈다.

/최영훈 기자